

한국의 외국인관련 정책 현황

- 법·제도 중심 -

발표자 : 시흥시 다문화정책관 김태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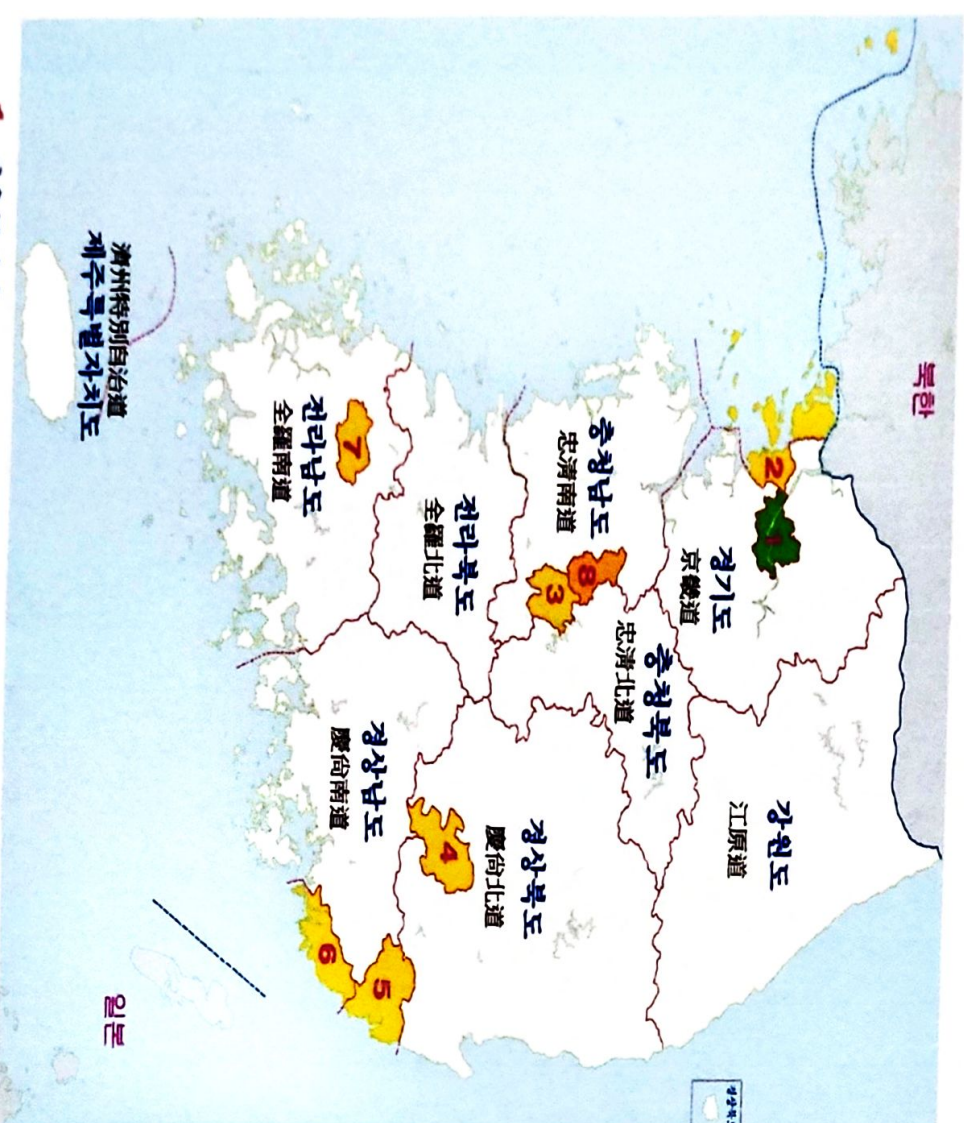
경력: (현)시흥시청 다문화정책관

전)경기도청 노동국

전)외국인노동자쉼터 등 사회활동가

학력: 공학사, 공학석사, 사회복지학석사, 행정학박사

대한민국 행정구역



- | | | |
|---|---------|---------|
| 1 | 서울특별시 | 서울特別市 |
| 2 | 인천광역시 | 仁川廣域市 |
| 3 | 대전광역시 | 大田廣域市 |
| 4 | 대구광역시 | 大邱廣域市 |
| 5 | 울산광역시 | 蔚山廣域市 |
| 6 | 부산광역시 | 釜山廣域市 |
| 7 | 광주광역시 | 光州廣域市 |
| 8 | 세종특별자치시 | 世宗特別自治市 |

대한민국의 행정 구역(大韓民國의 行政區域)은 1개의 특별시, 6개의 광역시, 8개의 도, 1개의 특별자치도, 1개의 특별자치시로 구성된다. 이상 총 17개의 행정구역은 광역지방자치단체로 분류된다.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광역자치단체의 영역 안에 있으며, 실질적인 지방자치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예외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는 해당 구역 내에 기초자치단체가 없다.

기초자치단체의 종류로는, 시(도 산하), 군(광역시, 도 산하), 구(특별시, 광역시 산하)가 있다

대한민국의 기초자치단체는 2020년 현재 226개

대한민국 외국인주민 증가

-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발표한『2019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2019.11.1.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한국국적 취득자·외국인주민 자녀(이하 '외국인주민')는 모두 **221만 6,612명**

* '18.11.1. 기준 2,054,621명 대비 161,991명 증가(7.9%)

* 외국인주민(90일초과 체류자)

- 이는 대한민국 **총인구*(51,779,203명)의 4.3%**로 OECD 기준 5%에 임박함
- OECD는 총인구 중 외국인, 이민2세, 귀화자 등 이주배경인구가 5%를 넘으면 **다문화·다인종 국가**로 분류
- 대한민국 **226개 시·군·구 가운데 총인구대비 5%이상인 지자체: 57개(25%)**

•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란?**

- 1) 지자체 거주 외국인주민 인구 1만명 이상
 - 2) 지자체 총 인구대비 외국인주민 비율 3%이상
 - 3) 지자체 거주 외국인주민 인구 1만명 이하이나, 비율이 3%이상
- 2020년 11월 발표된 행정안전부 <2019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자료>에 따르면, 현재 **지자체 외국인주민 집중 거주지는 95개 시·군·구(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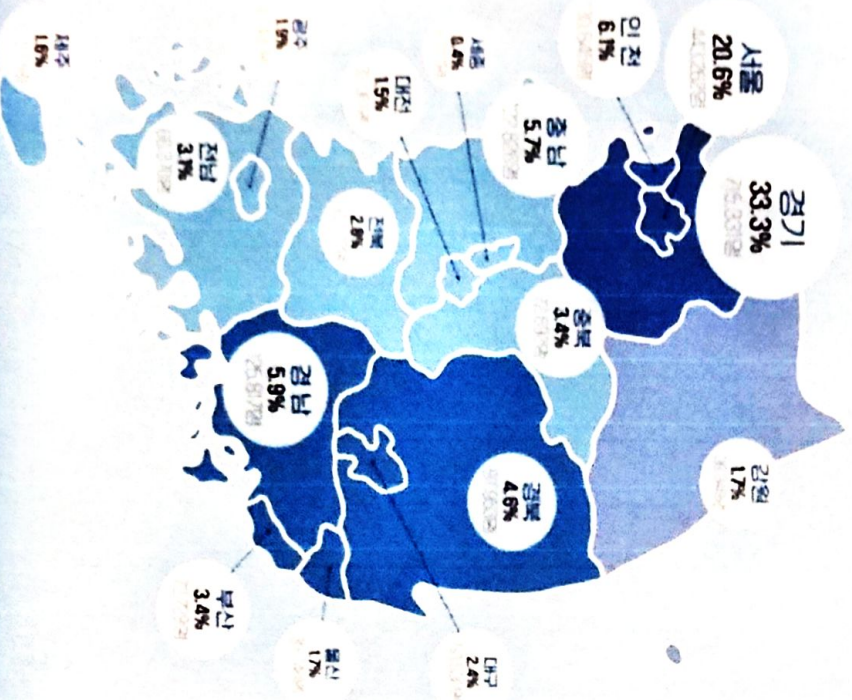
-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 증가 추세:

- ('16년)65개 → ('17년)69개 → ('18년)82개 → ('19년) 95개

2020년 국내거주 외국인주민 215만명(4.1%)를 차지합니다

2020년 국내 거주 외국인주민 215만명, 전년 대비 7만명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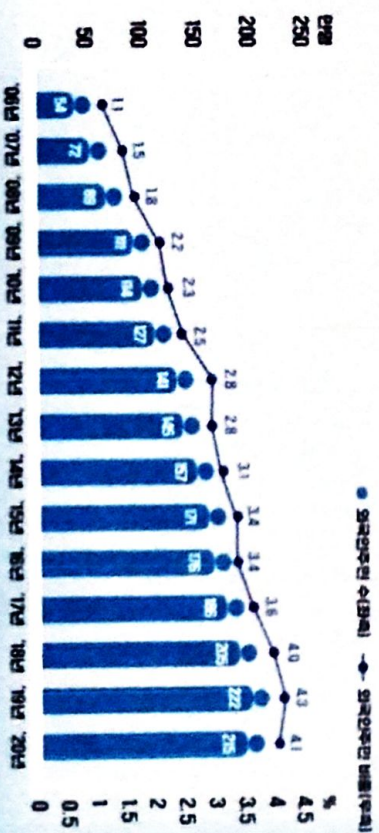
지역별 현황



유형별 현황



연도별 추이



한국의 외국인정책 관련 법

□ 이민법제(외국인관련법)로 분류되는 법률

법률명	제정 연도	소관부처	비고
국적법	1948년	법무부	
출입국관리법	1963년	법무부	
재외동포의 출입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1999년	법무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2003년	고용노동부	고용허가제
제한외국인처우기본법	2007년	법무부	
다문화가족지원법	2008년	여성가족부	
난민법	2012년	법무부	

체류자격 별 대상 설명

▣ 다문화가구

- 한국인배우자
- 결혼이민자(F-6 > F-5) 및 귀화자
- 국내출생자녀, 귀화 및 외국국적자녀(F-1, F-3 등)
- 기타 동거인

▣ 외국인주민자녀, 중도입국자녀, 이주배경청소년

▣ 외국인근로자

- 체류자격이 교수 등 취업분야(E1~E-7, E-9~E-10), 방문취업(H-2)인 자

▣ 외국인계절근로자

- 농어거에서 단기간 고용하는 외국인근로자(E-8)

▣ 외국국적동포

- 체류자격이 재외동포(F-4) 중 국내 거소 신고자

▣ 유학생(D-2, D-4)

외국인정책의 지역전달체계

중양정부의 지역전달체계 중심

대상	부처	지역전달기반	비고
다문화가족	여가부	지자체 위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정착
외국인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위임	출장소 체류
외국인근로자	고용부	고용센터 위임	사회통합프로그램(거점 등) 교육
학생	교육부	산업인력공단 위탁	고용센터 고용
		교육부	외국인력지원센터 적응
		교육부	학교 생활적응
외국인주민	행안부	지자체 위탁	다문화교육지원센터 생활적응
			다문화플러스센터 편의

외 기초단치단체 별 외국인복지센터 운영

주요 이슈 1: 부처별 정책 대상 이주배경청소년

▣ 이주배경청소년이란

○ 부모 혹은 본인이 이주의 경험을 지닌 9세에서 24세 이하의 연령에 속하는 사람

▣ 국제결혼가정 및 외국인가정자녀(청소년)/중도입국

부모배경		본인출생지	
부모 중 한명이 한국인	국내출생	국내출생	국외출생
부모 모두 외국인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자녀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자녀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자녀
	국내출생 외국인가정자녀	국외출생 외국인가정자녀	국외출생 외국인가정자녀

▣ 탈북청소년

부모배경		본인출생지	
부모 중 한명 이상 북한이탈주민	남한출생	남한출생	남한 외 지역출생
부모 중 한명은 외국인	남한출생 탈북배경청소년	탈북청소년	
다른 한명은 북한이탈주민			제3국출생 탈북배경청소년

교육부중심 개념

< 교육부 2021, 다문화교육지원계획 >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의
‘다문화학생’

국제결혼가정
우리나라 국민과
외국인이 결혼

국내출생 자녀
우리나라에서
출생 및 거주

한국국적

중도입국 자녀
외국에서 장기간
거주하다가 입국

한국국적/
외국국적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의
‘외국인인 아동 또는 학생’

외국인가정
외국인과 외국인이 결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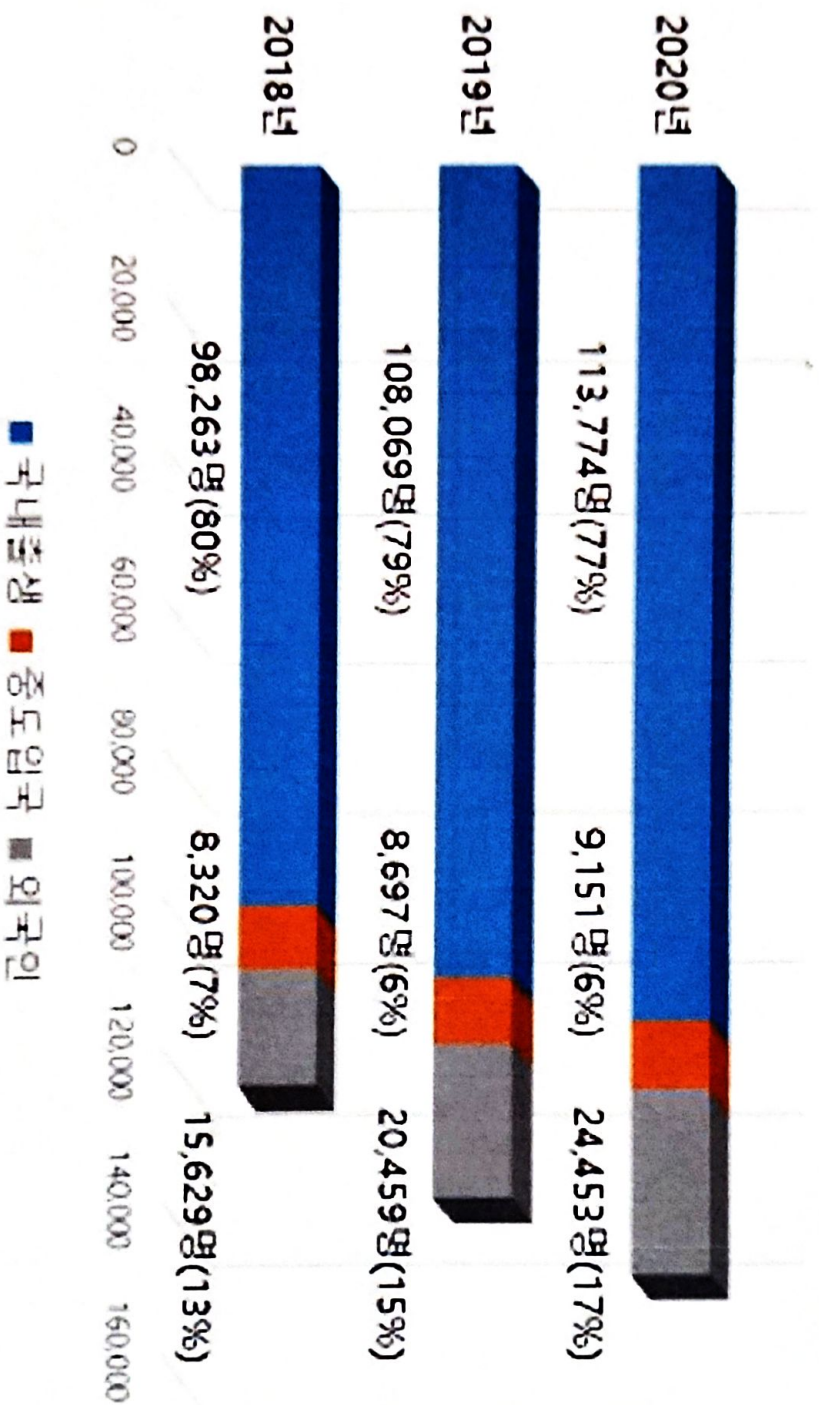
외국인가정 자녀

외국국적

등록 외국인

미등록 외국인
(불법체류 등)

이주배경청소년 전국 연도별 현황



< 교육부 2021, 다문화교육지원계획 >

이주배경청소년 관련 전달체계

▣ 부처별 관련 정책 대상 및 전달체계

관계법령	부처	대상	연령	전달체계
다문화가족지원법	여성가족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인과 결혼이민자 결혼 가정의 자녀 · 한국인과 귀화자 결혼 가정 자녀 	만 24세 이하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시·도다문화가족지원센터
청소년복지지원법	여성가족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청소년 · 그 밖에 국내로 이주하여 사회 적응 및 학업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 	만 9~24세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교육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출생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 · 중도입국자녀 · 외국인가정(미등록이주아동포함) 	만 24세 이하	중앙다문화교육센터 시·도교육청 시·도다문화교육지원센터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통일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벗어난 후 외국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만6세~ 24세 이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남북하나재단) 시·도지역응센터 (하나센터)
출입국관리법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법무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혼이민자나 귀화자가 전혼관계에서 남은 미성년 외국인자녀 	만18세 미만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사회통합프로그램운영기관

주요 이슈 2 : 외국인 인력

▣ 외국인 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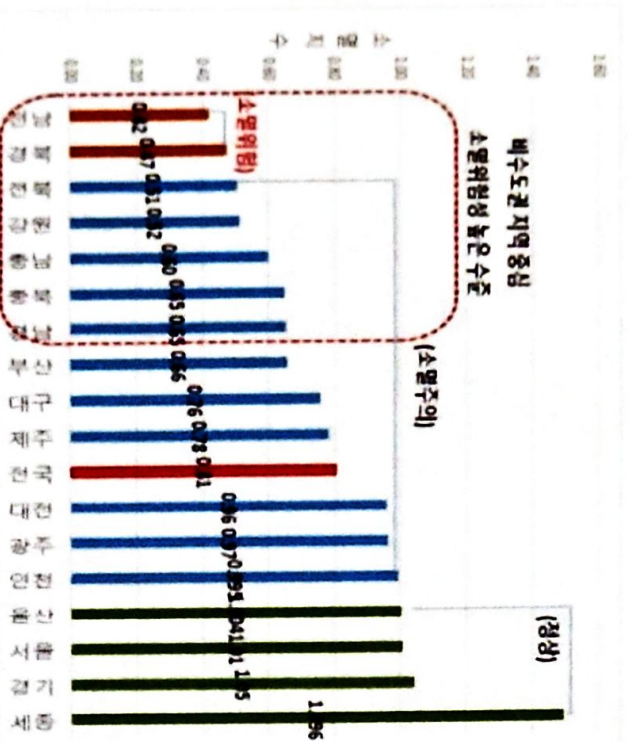
- 외국인노동자
- 계절근로자
- 중국동포
- 유학생
- 결혼이민자 까지

대한민국 체류 희망자는 돈 벌기 위한 자들...?

우리는 노동자를 불렀는데 사람들이 왔다(막스 프리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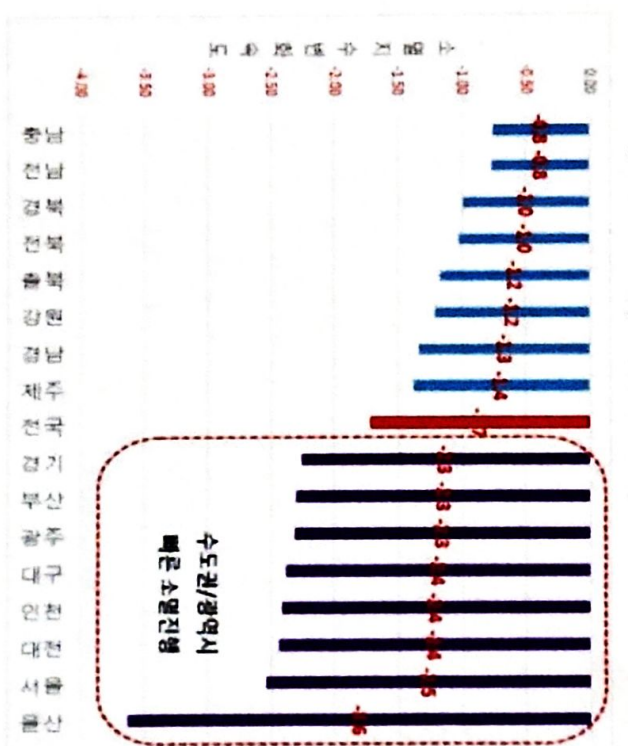
주요 이슈 3 : 인구소멸 - 지역특화비자

[그림 11-7] 시도별 지방소멸지수



자료 : 통계청, 주민등록인구 토대로 작성

[그림 11-8] 지방소멸 변화 속도



자료 : 통계청, 주민등록인구 토대로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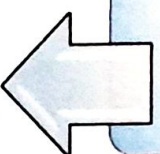
소멸위기 지역 중 소멸우려 지역은 50곳(21.9%), 소멸 가능성이 가장 높은 소멸위험 지역은 9곳(3.9%)이었다.

대한민국은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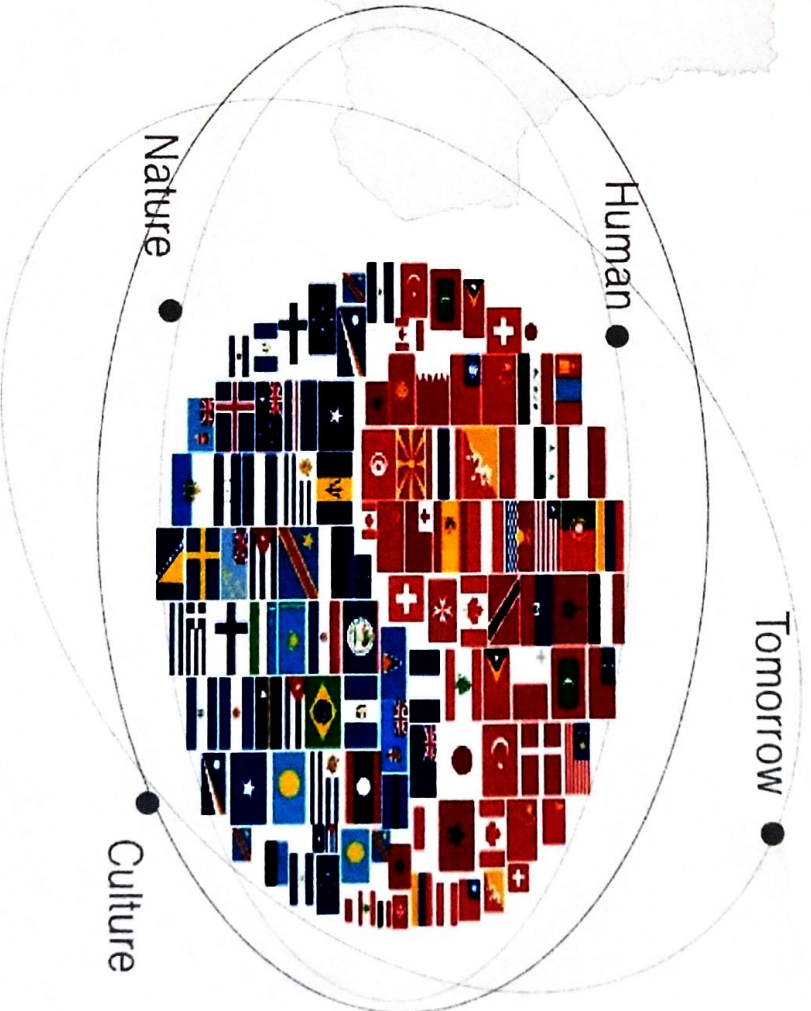
1. 이민을 보낸 나라 (赤貧無依)

2. 이민을 받는 나라 (窮餘之策)

3. 인식 개선 (易地思之)



외국인정책, 이민정책, 인구정책, 사회통합정책



감사합니다